

새로운 경제틀 속에서 충남도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박 종 찬
(朴鐘讚)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IMF 금융지원의 조건
- III.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 IV. IMF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V. IMF체제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I. 머리말

1997년 말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외환위기는 198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발생하였다. 1980년대 초에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국가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철수에 의해 촉발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이번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동남아시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 전염효과가 급속하게 파급되고 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부문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맞게하게된 이 위기의 영향은 자금난, 판매난, 기술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의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자금난을 가져왔고 많은 지역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

중앙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IMF와의 협의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 금융계의 한국에 대한 요구 및 외환시장의 변화 등에 대처하느라 지방의 중소기업에는 전혀 정책적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어 명백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 및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것은 현실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MF가 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국경제의 운용에 대한 요구조건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살펴본 다음 IMF체제가 국내 및 충남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MF 체제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II. IMF 금융지원의 조건

IMF는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긴축적 거시경제 운용, 자본시장 개방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시장기능의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여 98년도의 경제성장률을 1%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여 우리 정부와 합의하였다. 또한, 재정 및 통화긴축, SOC 투자 축소 등을 포함한 재정부문에서도 긴축적인 운용을 할 것을 요구한다. 재정의 세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 특별소비세·교통세 인상, 소득세·법인세 감면범위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과세특례자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리 면에서는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98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9%내로 억제할 것을 우리 정부와 협의하였다.

자본시장 개방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부문에서는 먼저, 금융시장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여 98년에 외국인 종목당 주식투자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회사채, 기업어음(CP) 등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확대 및 각종 영업제한 폐지,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완화,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 지분한도 확대, 적대적 M&A시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주에서 40%+1주로 하향조정하고 완전 폐지 추진,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자회사 설립허용 등 거의 모든 업무영역에 있어서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문호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기업 지배구조 및 민간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부문에서도 경영의 투명성 확충 및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폭적인 개혁이 진행될 것이다. 먼저, 대기업의 차입경영 행태를 지양하고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30대그룹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하고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 지급보증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해소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고용조정 허용, 근로자 파견제 도입, 고용보험의 기능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III.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

1960년대 이후 연평균 두 자리수 이상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평가

와 부러움을 받고 있던 한국경제가 갑자기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총체적인 정경유착에 기인한 문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실증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재벌중심의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규모의 경제가 큰 사업에 재벌들이 경쟁적으로 진입함으로써 대규모의 자금을 금융권에서 독식하여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는 정경유착과 상호지급보증 등을 통해 과다차입 및 외형확대에 의한 경쟁을 함으로써 채산성을 고려치 않은 다각화 및 과잉·중복 투자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두번째 원인으로는 정부주도 경제정책의 실패와 정책대응 실기를 들 수 있다. 경제의 규모가 작고 고도 경제성장 초창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성공적인 정부정책의 연장으로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된 상황하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원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정경유착에 의한 정치논리의 개입으로 인한 경제논리의 제약으로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경유착은 대기업의 연쇄 도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세번째의 원인으로는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지

나치게 낙후된 금융산업을 들 수 있다. 사업성 평가 및 신용평가가 능력이 낙후되어 있어 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 경제적인 판단으로 대출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였다. 또한 금융의 기업부문에 대한 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시장의 가격원리에 따른 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다양한 고용보호장치 등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위에서 언급한 국내경제 취약점이 한보철강 및 기아의 부도로 인한 종금사 및 은행권의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자본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

IV. IMF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IMF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국경제는 대변혁을 맞고 있다. 기본적으로 IMF가 요구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조건들은 시장경제 원리의 과감하고 신속한 적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경제 아래서 규제와 보호 속에서 영업을 해온 금융기관, 정경유착에 의해 기업활동을 해온 대기업,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에서 열세에 있고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IMF의 급격한 시장경제

원리 수용요구에 심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의 부정적 영향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게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경제의 체질이 전반적으로 선진화되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예상되는 IMF체제의 국내 및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의 부정적 영향과 중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을 분석해 본다.

1. IMF체제가 국내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단기의 부정적 영향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점은 일반적으로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그리고 기술난 등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가운데 IMF체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자금난의 심화와 고금리에 의한 기업 부도의 어려움이다. 또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실업이 급증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의 초긴축 재정 기조의 유지하는데 따르는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위축으로 나타날 판매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은 자금시장의 경색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IMF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축소, UR

협정상 금지 보조금 성격의 각종 중소기업 정책금융 및 세제혜택의 축소·폐지, 부도유예협약, 협조용자 등 각종 경쟁제한장치의 축소 및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지원이 축소 내지 폐지되는 상황아래서 대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어음·私債시장의 혼란으로 신용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대단히 심각하게 되어 부도의 위험하에 완전히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 편중여신과 대기업의 차입경영행태의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신용평가능력의 결여로 여유자금이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 크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중소기업 대량 부도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도의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권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대출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보다 더욱 더 무리한 담보비율을 요구하려 하거나 아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려고 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금리를 불문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금융기관 나름대로 IMF가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 요건 충족을 위한 대출축소, 금융기관간 M&A의 본격화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 기존 대출금회수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금사 파산과 은행의 통폐합이 추진됨에 따른 기존 대출금의 회수로 그동안의 자금줄마저 끊어질 가

능성이 크며,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또 다른 금융기관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해 무더기 부도사태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이 위와 같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함께 담보능력이 있거나 신용이 있어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는 기업의 수익성을 급속히 악화시켜 기업의 장기적인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IMF는 국내의 금리를 높게 유지시키는 것만이 해외에서 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율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이러한 환율의 안정이 금리 안정의 필요조건이라고 강력히 고금리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및 통화의 긴축운용,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국채발행 등 금리인상 요인에 의한 국내금리의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리상승에 의한 수익성의 악화는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유동성의 부족에 의한 도산의 위험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율의 상승도 물가를 상승시켜 단기적으로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난과 함께 중소기업이 겪을 또 다른 어려움은 극심한 판매난을 겪을 것이다. IMF는 1998년도의 경제성장률을 1%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긴축적 재정운용 및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내수부분의 극심한 경기위축을 초래해 내수업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에게는 1998년에 판매면에서 마이너스 성

장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저성장 정책, 세율인상, 임금동결 또는 삭감, 실업의 증가 등에 따른 소비감소로 중소기업의 판매난은 대단히 심각할 것이다. 특히, 하청 중소기업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물가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량 반영치 못함으로써 수익성은 더욱 악화하여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산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의 도산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중소기업 제품판매는 더욱 위축되어, 중소기업 제품이 품질·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도 소비자가 애프터서비스 등을 우려하여 파산 가능성이 낮은 대기업 제품으로 수요를 전환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그 밖에, 대기업의 도산이 지속될 경우 하청 중소기업의 판매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재정긴축과 감량경영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경우 대규모 건설업체의 도산에 따른 하청 건설업체 침체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제품 유입 증가로 중소기업의 내수판매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폐지된 전자, 자동차부품 등의 경우 관련 기계 및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 IMF체제가 국내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중장기의 긍정적 영향

IMF체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중소기업에게 가중시켜 부도 및 도산의 경우에 이르는 기업이 많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시키고 기업의 경영행태를 투명하고 수익성 위주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대기업에 금융권의 여신이 편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국내 및 도내의 중소기업들 가운데 신용이 우수하거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과거보다 자본조달이 용이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IMF체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고 금융산업의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의 구조개편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IMF의 금융지원은 대외 신인도를 상실하여 외환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단기 해외채무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신인도 회복, 주식 및 채권시장의 해외개방 그리고 외환시장의 대폭적인 문호개방으로 환율결정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환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외환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원화의 고평가 문

제가 시장의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 우리 기업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낮은 섬유·가구 등 중소기업형 업종과 대기업에 비해 자본 집약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긍정적인 영향은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그룹내 소수 전문업종으로 축소 지향적인 구조개편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대기업이 영위해오던 분야를 중소기업에게 이양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의 강화로 국제경쟁력에 대비하는 노력이 증가하여 중장기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확립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질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경쟁체제의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토지 등 부동산값의 안정에 따라 물가안정과 고비용 구조의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호전되어 중소기업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방만한 선단식 경영체제를 축소해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의 중소기업 유입으로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따라 산업인력의 합리적 재편성 과정에서 우

수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번째의 긍정적인 영향은 금융산업의 개편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통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따른 영향이다. 단기적으로 은행, 증권사, 종금사, 보험사는 물론 중소기업 관련 여신 전문기관 및 서민 지역 금융기관(상호신용 금고,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의 도산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따라 금융 중개비용의 절감으로 금리가 하향·안정화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의 확대와 진입규제의 완화에 따른 경쟁촉진으로 금융시장의 구조가 개편되어 금융시장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 나서게 되어 기술력을 보유한 우량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자금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이 제고되고, 금융시장 가격기능이 정상화되어 담보대출, 깎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이 개선되어 신용이 있는 중소기업의 제도금융권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이제는 해외금융관련 규제 완화로 우량 중소기업의 해외 저리자금 이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해외 금융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로 대기업의 해외

자금조달이 확대되어 국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여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IMF체제는 우리 경제의 기조를 건실화 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정부가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는 21C 무한경쟁에 대비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어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중소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공정경쟁의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의 창의, 기술, 혁신, 조직의 유연성 등을 본질로 하는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활발한 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제의 구조 고도화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처럼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고도화된 경제기반구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 IMF체제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위에서 분석해 본 것처럼 IMF의 금융지원이 우리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혁은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으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내의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부도와 도산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 및 기업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단기간에 받을 영향은 국내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 그 가운데 충남과 같은 지방의 중소기업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단기적으로 받고 있는 충격은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 및 순환이 정체된 상황 즉,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든가 외부불경제가 발생하여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기능에 그냥 맡겨 두면 가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공급이 멈춘다든가 또는 시장의 기능이 원상태로 회복하여 다시 작동하기까지의 조정기간이 장기화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개입하는 경우가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은 자금시장에서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되지 않는 명백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조정기간을 단축시키는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해야만 하는 정책과 지방정부가 개입해야만 하는 정책의 방향을 요약해 본다.

1.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지금의 경제상황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금의 유통속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시장에서 아무리 높은 금리를 주어도 자금조달이 되지 않는 시장의 기능이 정지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실패에 따라 도산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부도를 막는 것이다. 특히, 한 기업의 부도가 다른 기업 또는 하청계열사의 부도로 이어지고 있는 연쇄부도사태를 예방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시장기능에 기업의 운영 및 평가를 맡겨두는 미국의 경우에도 시장기능이 마비된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풀어주거나 조정기간 단축을 위하여 개입한 사례가 여러번 있다. 1980년대 후반 저축대부자조합에 대한 정부의 개입(Savings & Loan Association Bailout)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다.

우리의 이번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도산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 IMF의 지원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여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를 방지해야만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1980년대 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한 것이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해 이룬 것처럼 우리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벤처

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기업에 금융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상업어음 할인율의 활성화를 통해 실물경제 흐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수취한 어음은 100% 할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음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확대하고 재할인 비율을 확대시키는 등 어음할인 유인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초래되는 통화량의 증가는 통화채의 매각 등 다른 정책을 통해 조절토록 하고, 우선은 할인거부로 인해 자금의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사태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액 한도대출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금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급격하고 과도한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고 인하시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아래에서는 기업들이 존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금리를 낮추는 노력과 협의를 IMF와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실, IMF가 요구하고 있는 긴축정책과 고금리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IMF와의 협의를 통한 금리의 인하와 재정긴축의 완화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고금리 하에서는 금리의 효율적인 자금 배분기능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정의되는 시장금리수준을 크게 넘는 고금리 유지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소비수요가 실업의 증가 및 심리적 위축으로 축소됨에 따라 투자수요의 감소에 따라 자금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금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리는 결코 고금리를 유발하지 못할 상황이며, 금리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긴축재정 운용과 총수요 억제정책을 통하여 자금수요는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IMF가 주장하는 것처럼 높은 금리 유지로 해외자금을 국내로 끌어 들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정책은 금리의 수준을 협의하여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더 낮추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기간도 단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업보다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더욱 심하게 겪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정책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사장된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재원의 확보를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채권을 발행한 후 경기회복 후에 환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일정기간동안 상환을 유예시켜주는 조치도 현재와 같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대기업 보다 어음할인의 정지 및 연쇄부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을 단기적으로 살아남게 하는 것이 대량 부도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새로운 경제체제 아래서 대기업의 결합재무제표 도입 및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해소가 진행되어 대기업 편중여신이 해소되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유지되어야만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경색을 막을 수 있어 대규모의 중소기업 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WTO체제 아래서 정부의 직접 및 간접보조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금지성격의 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계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철폐가 불가피한 경우도 경과기간중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여 충격을 완화하여야 할 것

이다. 상계가능보조금의 경우 객관적·중립적 기준의 설정 등으로 특정성을 제거함으로써 허용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산업합리화 지원이나 투자촉진 지원의 경우 허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대표적 수단인 하나인 무역금융은 준상업어음화하여 한국은행 재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를 다시 표지어음화하여 일반매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L/C대금의 100% 결제, D/A USANCE 등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 등 금융적인 면에서의 모든 애로를 조기에 타개해 중소기업의 수출의욕을 살려서 자금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충청남도의 도내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번 IMF체제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도내에 소재한 한보철강 및 기아자동차의 부도로 인해 많은 하청 중소기업

〈표 1〉 충남도내 한보철강·기아자동차·한라 협력업체의 피해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만도기계	한라공조
피해 협력업체수	207	31	10	8
피 해 금 액	70,599	23,980	N.A.	N.A.
피 해 지 역	당진(165), 서산(17), 천안(16), 아산(4), 기타(5)	당진(14), 아산(6), 서천(5), 서산(2), 천안, 연기, 홍성, 예산 각(1)	천안(2), 아산(8)	천안(6), 아산(1), 서산(1)

및 지역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보철강 부도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 피해업체의 수는 207개에 달하고 기아자동차는 31개에 달하는 등 서북부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지역의 여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경색을 파생시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 IMF위기로 인해 만도기계, 한라공조 및 국내 경제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내의 많은 중소기업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충남 제조업체의 규모를 분석해 보면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제조업체 4,319개 가운데 53개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내지는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위에서 분석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업종구조분석을 살펴보면 비중이 큰 식료품, 담배, 목재, 가구, 섬유, 가죽, 종이, 인쇄와 같은 업종의 경우는 극심한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파산의 위기에 더욱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골재채취 및 벽돌제조와 같은 비금속 광물업체의 경우도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에 따른 피해로 부도의 위험에 몰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중소기업이 양적·질적으로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97년 초부터 발생한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와 IMF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극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제기한

대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충청남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판매난 및 연쇄부도에 따른 대량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확충하여 자생력을 길러 신용도의 증가에 의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 정책은 道의 다른 예산의 축소 또는 전용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도내 우량 중소기업의 흑자부도 및 연쇄부도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극심한 판매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구매를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고, 1998년에는 국내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내수판매 부진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이 정부가 기업을 보조하는 것을 억제하는 나라도 「Buy in the State 산업정책」으로 州내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1998년 1/4분기중 단체 수의계약 등을 통해 도·시군 및 공공기관의 구매를 조기에 집행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도내 중소기업의 판매와 지원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허용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 인력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조금 등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지원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

도내 중소기업의 문제를 타개하고 지원하는 정

〈표 2〉 충청남도 제조업체 규모별·업종별 현황

(단위 : 업체수, %, 종업원수)

분 야	구 분	계	식료품 담배	섬유 가죽	목재 가구	제지 인쇄	화학 석탄	비금속	금속 기계	전기 전자	기타
총 계	업체수	4,319	754	488	198	190	321	961	1,054	327	26
	종업원수	(100) 142,077	(17.5) 19,901	(11.3) 13,461	(4.6) 3,561	(4.4) 6,806	(7.4) 12,858	(22.3) 22,435	(24.4) 42,929	(7.6) 19,952	(0.6) 174
대 기 업	계	53 44,266	7 6,950	4 3,034	2 619	4 1,945	8 6,077	5 3,252	14 13,733	9 8,656	
	300인 이상	51 43,396	7 6,950	4 3,034	2 619	4 1,945	8 6,077	5 3,252	12 12,863	9 8,656	
	건설중								2 870		
중 기 업	소 계	492 (100) 51,604	55 (11.2) 5,687	47 (9.6) 5,035	14 (2.8) 966	23 (4.7) 2,871	35 (7.1) 3,701	93 (18.9) 8,186	155 (31.5) 17,488	70 (14.2) 7,670	
	100 ~299인	176 29,413	19 3,146	16 2,829	2 277	9 1,866	15 2,376	25 3,797	57 9,882	33 5,240	
	50 ~99인	290 19,620	35 2,489	31 2,206	11 639	14 1,005	20 1,325	66 4,237	79 5,484	34 2,235	
	건설중	26 2,571	1 52		1 50			2 152	19 2,122	3 195	
소 기 업	소 계	3,774 (100) 46,207	692 (18.3) 7,264	437 (8.1) 5,392	182 (9.2) 1,976	163 (8.2) 1,990	278 (9.0) 3,080	863 (22.9) 10,997	885 (23.5) 11,708	248 (6.6) 3,626	26 (0.7) 174
	21 ~49인	761 24,340	97 3,192	90 2,869	26 833	34 1,116	48 1,431	196 6,211	203 6,742	66 2,112	1 34
	2 ~20인	2,405 19,758	515 3,802	305 2,430	129 1,026	105 850	178 1,467	533 4,421	491 4,388	133 1,256	17 119
	건설중	608 2,109	80 270	42 93	27 117	24 24	52 182	134 365	191 778	49 258	8 21

자료 : 충청남도, 97 제조업체현황, 1998.

책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의 중소기업 연쇄부도방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차원의 중소기업 수출 환경개선 및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감독강화, 도내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 및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등 재정자금을 현재와 같이 저금리로 98년초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무원칙한 대출중단 및 대출금회수의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최근의 금융위기는 재무관리의 관점에서 기업의 존립행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중소기업에게 인식시켜 유동성위험, 금리위험, 환위험 등 재무위험에 대비한 위험관리체제 구축을 장려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에 유리한 자금조달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현금흐름을 중시하여 유동성 확보 및 경영 합리화로 한계사업 정리, 기술혁신, 대고객서비스 제고,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 등을 도모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IMF체제하에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실화는 死活이 걸린 문제가 될 것이므로 적기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재무구조의 건전화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을 외형 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해야함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신용에 따른 대출금리의 밴드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인도의 확보는 양질의 자금을 저렴

하고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므로 기업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위기상황은 시장기능이 마비되어 자금의 순환이 되지않는 상태이고 도내의 중소기업은 파산의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충남도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흑자도산을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를 방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여건조성에 맞추어야 한다. 또한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감소를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회복을 활용하여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높은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 회복에 안주하여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중소기업의 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고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로의 구조조정을 지향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할 것이다. **열린충남**

참 고 문 헌

- 박동순·전주형, “외환위기의 구조적 요인분석”, 조
사연구자료 97-1, 한국은행 국제부, 1997. 7.
- 주상영,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
와 정책시사점”, 정책연구 96-3,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6. 8.
- 충청남도, 97 제조업체현황, 1998.
- 한국은행대전지점, 대전충남 지역경제동향, 1997년
각월호.
- _____, 대전충남 지역경제연보, 각연도.
- Honohan P., “Banking System Failures in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Diagnosis and
Prediction”, *BIS Working Papers*, No.39,
1997. 1.
- 大前研一, 金融危機がらの 再生, プレジデント社,
1995. 11.